

【 2018.1.24(수) 강원일보 】



영진건설 장학금·쌀 기탁 채희장 영진건설 대표는 23일 향토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장학금 300만원을 동해시민장학회에 기탁했다. 이에 앞서 삼화동·동호동주민센터에 쌀 10kg 30포대를 각각 전달했다.

【 2018.1.24(수) 강원도민일보 】



영진건설 장학금 기탁 채희장 영진건설 대표는 23일 동해시민장학회를 방문, 심규언 시장에 계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① 제천~삼척 ② 춘천~철원 고속국도 ③ 강릉~제진 철도

3대 신규 SOC 중심 도, 국비확보전 시동

내년도 국비 5조5000억 목표
실시설계 용역비 각 10억 요청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신 강원 전략사업도 중점 추진

강원도가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5조 5000억원으로 설정, 남북 교통망인 동해선(강릉~제진) 철도 등 3대 신규 SOC 사업과 신(新)강원 전략 사업 등 '포스트 올림픽'을 위한 국비확보전에 시동을 건다.

강원도는 23일 '2019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고 각 실·국별 신규 사업 발굴 및 계속 사업안 등을 논의했다. 도는 3대 SOC 신규 사업으로 △제천~삼척 고속국도 △춘천~철원 고속국도 △동해선(강릉~제진) 철도 사업을 꼽았다. 이 가운데 춘천~철원 고속국도와 동해선 철도 등 2개 사업은 평창올림픽 개최 후 남북 관계가 당분간은 해빙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 남북 SOC 교통망 구축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3개 사업과 관련,

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각 10억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제천~삼척 고속국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천~삼척 ITX와 함께 약속한 강원도 공약 사업이다.

도는 당초 2개 사업 병행 추진 입장을 밝혀 혼선을 빚은 가운데 지역 의견을 수렴, 고속국도 우선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도는 제천~영월 구간 용역비 확보에 나선다. 춘천~철원 고속국도와 동해선 철도는 통일북방시대 대비 핵심 교통망이다. 이와 함께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 100억원을 비롯해 △농업신기술 시범사업(50억원) △IOT 기반 스마트토이 클러스터 조성(20억원) △스마트토이 SW융합생태계 조성(20억원) △6차 산업화 지구 조성(4억 5000만원) 등 신 강원 전략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국비 확보가 불발된 올림픽 사후 활용 사업과 관련, 도는 올림픽 플라자 유산 조성 사업(74억원) 등을 재추진한다. SOC 분야 계속 사업은 지난해 도가 SOC 사업 1순위로 정한 제2경춘국도 건설을 비롯해 △여주~원주 철도 △경원선(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 △동해선(포항~삼척) 철도 사업 등이다. 박지은

공사비를 상품권으로... 甲甲한 강원도

정부 감사때 '위법' 지적에도 조례개정 차일피일

강원도가 지역상권을 살리겠다며 1년 넘게 공사대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 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지만, 조례 개정을 미루면서 위법한 입찰공고를 지속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2016년부터 지역 화폐의 일종인 '강원 상품권'을 공격적으로 발행, 유통시키고 있다. 지난해까지 모두 580억원어치를 발행했고, 올해도 250억원어치를 발행할 예정이다. 지역소비 촉진과 지역상권 보호, 지역자금 유출 방지가 취지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그런데 도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작년 부터 도가 발주하는 공사, 행사, 용역, 물품 구매 대금의 3~8%를 상품권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강원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도 만들었다. 입찰공고문에는 '강원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문제는 건설사에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 분담'이라는 점이다. 대금을 상품권으로 받더라도 하도급대금이나 노임·장비대금 등은 100%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권장 구매비율도 높아 경영 부담이 크다.

반면 상품권 가맹점은 여전히 부족하고 유통 실적도 기대에 못 미친다. 환전수수료도 조례에 '환전금액의 1.3%'라고 정해놨지만, 실제로 2% 수준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은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 울며 겨자 먹기로 현금화하는 실정이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관계자는 "강원건설단체연합회 차원에서 강원 상품권 관련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도와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도 "건설현장의 최하층인 일용직들에게 상품권이 떠넘겨질 우려가 높다"며 제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kth@ >3면에 계속

**공사비 상품권으로 받아도
하도급대금 등은 현금 지급
지역 건설사 경영악화 초래**

1면서 계속 = 공사비를 상품권으로... 甲甲한 강원도

이는 정부합동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 공개한 감사 결과에서 강원도 조례 중 '입찰공고 또는 계약 체결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조항'이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지방계약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한 조례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강원도는 반년이 넘도록 관련 조례를 바꾸지 않고 있다. 행안부가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고향사랑 상품권'의 발행근거를 담아 연내 관련법(고향사랑 상

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제정할 계획인 만큼 해당 조문을 보고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관련법이 만들어지면 상품권의 공사대금 지급 권고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강원 상품권 발행액의 공사대금 비중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회계제도와 관계자는 "고향사랑 상품권 활성화법과 상품권의 공사대금 지급 건은 전혀 별개"라며 "강원도가 감사결과에 따라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형기자 kth@